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29
----------	------

발의연월일 : 2020. 11. 11.

발 의 자 : 박상혁 · 서삼석 · 김철민
이정문 · 김수홍 · 허영
박재호 · 김정호 · 정필모
민형배 · 강준현 · 최인호
김윤덕 · 임종성 · 윤후덕
송옥주 · 정태호 · 진성준
의원(18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관리체계를 관리·감독·운영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함(안 제28조)
- 다.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식별 및 증명정보 관리, 시설 및 장비 보호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정책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
- 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종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0조).
- 마. 인증기관의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

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 점검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함(안 제33조).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 복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

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인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안 제38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8.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통신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의 구성요소 등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기록의 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발급, 관리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체를 말한다.

12. “이용자”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내 역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제4조제1항제3호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각각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1조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4장(제27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27조(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관리·감독·운영하는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안전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5.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체계 관리·감독·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기관 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정한다)

2.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종류와 인증업무의 내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담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의 발급·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식별 및 증명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수수료 종류 및 내용 등 수수료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 관리 및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종류
2. 인증서 발급, 폐지 등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등 각종 제한, 의무사항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공고설비 및 방법
5.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6. 인증기관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7. 개인정보보호 정책
8.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 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인증서 등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서 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9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4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이하 “안전성 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성 보호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목적,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 계획을 검사 개시 7일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방법·출입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예방·대응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발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해당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36조(인증서의 폐지) ① 인증기관 및 인증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검증 자격이 있는 인증기관의 검증에 의하여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 그 밖에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인증기관 및 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종전의 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종전의 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중 “제19조”를 “제19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장 벌칙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인증기관에게 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자율주행협력시스템</u>”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p> <p>4. ~ 6.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2조(정의) ①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자율협력주행시스템</u> - ----- ----- ----- ----- ----- ----- ----- ----- -----.</p> <p>4. ~ 6. (현행과 같음)</p> <p>7. “<u>자율협력주행 인증</u>”이란 <u>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면기지국 등 도로교통</u></p>

<p><u><신 설></u></p>	<p><u>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u></p>
<p><u><신 설></u></p>	<p>8.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통신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의 구성요소 등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p>
<p><u><신 설></u></p>	<p>9.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기록의 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p>
<p><u><신 설></u></p>	<p>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발급, 관리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p>
<p><u><신 설></u></p>	<p>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체를 말한다.</p>
<p><u><신 설></u></p>	<p>12. “이용자”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내 역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p>
<p><u><신 설></u></p>	<p><u>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u></p>

	이용촉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자율주행협력시스템</u> 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u>자율협력주행시스템</u>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u>자율주행협력시스템</u>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 ----- ----- ----- ----- <u>자율협력주행시스템</u>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생략)

제21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율
협력주행시스템-----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제21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

-----자율협력주행
시스템-----

-----.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생략)

<신설>

<신설>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현행과 같음)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27조(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관리·감독·운영하는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의 구축 및 운영
2.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
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
치에 대한 심사, 안전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
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5.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
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과

<신 설>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체계 관리·감독·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기관 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
실 또는 정지된 자

라.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
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에 한한다.)

2.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 설>

법인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
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종류와
인증업무의 내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

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
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
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
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담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
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서의 발급·폐기 등 관
리에 관한 사항

2. 식별 및 증명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의 보

<신 설>

호에 관한 사항

4. 수수료 종류 및 내용 등 수

료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 관리

및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

칙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

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

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

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

다.

1. 인증서 종류

2. 인증서 발급, 폐지 등 인증

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이

용조건 등 각종 제한, 의무사

항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공고설비 및 방법

5.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

한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신 설>

6. 인증기관 보증 및 손해배상 책임

7. 개인정보보호 정책

8.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 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신 설>

된 인증기관은 인증서 등을 다
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
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
서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
서 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제2항
에 따른 인계·인수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
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
생한 경우

2. 제29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
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경우

5. 제34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장애 예방
·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거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경우

<신 설>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이하 “안전성 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성 보호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신 설>

시설 및 장비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목적,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 계획을 검사 개시 7일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방법·출입,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예방·대응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 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체계의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발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해당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36조(인증서의 폐지) ① 인증기

관 및 인증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증서

<신 설>

를 폐지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검증 자격이 있는
인증기관의 검증에 의하여 폐
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 그 밖에 인증서의 신뢰성이
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인증기관 및 인증관리센터
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
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사회
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타 공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

<신 설>

<신 설>

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 · 제28조 (생략)

<신설>

제29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제39조 · 제40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제19조 및 제38조--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증기
관에게 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
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
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
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